

'재벌건설사 횡포 금지법' 개정 시급

부영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 공공주택 특별법... 대우건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검찰과 경찰은 10일 부영그룹과 대우건설을 압수수색하고 부영그룹의 수십억 원 탈세와 해외법인을 통한 비자금 조성, 개인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와 대우건설의 신반포 15차 재건축 조합원 대상 금품 살포 혐의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부영주택은 최악의 부실시공과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폭탄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또 박근혜정부에서 주택도시기금과 선분양보증을 독식한 사실이 지난 국정감사

에서 밝혀졌다.

최근 이종근 회장이 박근혜정부에 K스포 츠재단 출연을 대가로 세무조사 무마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전 정부와 심각한 정경유착 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부영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재벌건설사들이 임대주택 임대료를 연 5%씩 올리며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법의 허점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

'서민들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놓겠다'고 약속했던 정부 여당은 임대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대우건설의 재건축 조합원 대상 금품 살포 역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행처럼 이뤄져온 일이다.

문재인정부가 재벌건설사들의 무상 이사비 제공 무이자 이주비 지원, 초과이익 대납 등 공공연한 불법 대표행위를 금지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적폐를 청산

하기 원한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만이 해답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재벌건설사의 이사와 시중금리 이하 자금 용자 중개, 앞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재벌건설사들의 과당경쟁으로 불법천지가 된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개혁하기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엔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법무장관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금지 특별법 추진"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상기 법무부장은 11일 오전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일단은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관련 부처와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고 조만간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 생각한다.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화폐 정도로 부르는게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가상화폐를 사실상 투기나 도박으로 성격 규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다"며 "가격 급등락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상품거래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버블이 붕괴했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가 너무나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박 장관은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라며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악이 너무나도 클 게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물거래소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서 가상화폐를 하나의 가치를 수반하는 어떤 상품으로 본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김치 프리미엄'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도 한국 가상화폐 거래가 비정상적인 것의 평가가 내려진 게 아닌가 싶다"며 "국가산업 발전에 긍정적 측면보다는 특히 개인의 심대한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래 형태"라고 강조했다.

"갑자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하면 투자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극히 위험한 거래란 사실을 계속 경고했다"라며 "가상화폐를 새로운 금융상품처럼 취급하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르다"라고 경고해온 게 기본적인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위험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를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이견이 없어 협의가 끝난 상황이다. 다만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는 금지하지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를 막을 수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가상화폐 거래가 음지화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그런 우려 때문에 거래소 폐쇄 등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정부로서는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지만 개인의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부탁한다"며 "굉장히 위험한 거래란 사실을 본인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는 법무부 TF(태스크포스)를 꾸려가며 갖가지 규제책을 내놓는 등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 앞서 최중구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을 자청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뉴시스

여야, 1월30일부터 임시국회 합의

여야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30일간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11일 합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열고 회기 결정의 건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사전에 법사위에서 처리된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월31~2일 매일 오전 10시 이뤄진다.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월5일과 6일 각각 바른정당과 정의당이 대정부 질문 전 하기로 했다.

대정부질문은 2월5~7일 3일간 진행된다. 5일은 정치통일외교 분야, 6일은 경제 분야, 7일은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뤄진다. 질의의원은 12~13인으로 1인당 질의시간은 10분씩이다.

여야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월 20일과 28일 2차례 열기로 합의했다.

박 원내수석은 "그 사이에 상임위 활동을 하기로 하고 각 상임위 법안 심사를 적극 하기로 했다"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오후나 대정부질문이 있는 오전이라도 상임위를 열어 계류된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 운영위는 소위가 구성돼 있는데 소위활동이 많지 않다"며 "인사청문제도 소위 등 구성을 완료해서 1~2월 소위가 가능하도록 합의를 봤다"고 부연했다.

/뉴시스



"보수야합 멈춰라" 11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보수야합 지지·국민의당 정체성 지키기 광주·전남 당원 간담회가 열렸다. 국민의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간담회가 끝난 뒤 바른정당과의 통합 반대를 외치고 있다.

국주영은 도의원, 지방계약법 개정 건의안 발의

"개별법률에서 정한 계약방법보다 예규 우선 적용 사례 많아... 소수 사업자들 독식"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은 10일, 건의안을 통해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결정기준')의 내용에 '개별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각종 감사에서 지적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다른 법률의 적용을 기피하고 지시문서인 각종 예규를 우선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즉시 개정하라고 건의했다.

국 의원은 이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개별 법률들은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계약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담당자들은 행정자치부 등의 각종 감사에서 지적당한 것을 우려해 행정자치부 예규만을 급과목으로 삼고 있어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한 계약방법 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5조에는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시 "품질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품질성능 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통한 기준편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규정으로 즉시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벤처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으나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서조차 참가 자체를 차단당하고 당락을 결정하는 기업신용등급이 우수한 소수 사업자들이 독식하는 기득권 보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행 지방계약법 관련 예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방계약법 및 관련 예규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2017.12.1 ~ 2018.1.31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 청명한 조직문화를 위해 콜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민간기업)

후원금 사용내역	01	02	03	04
취임계승 맞춤형	51,370,679,216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인원 지원보급
			5,733,677,999	...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대사 류수영